



# HanSun Policy Brief

Hansun Foundation

2013. 08. 07

광복절에는 건국-독립을 우선적으로 기념해야

---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본 자료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재단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www.hansun.org](http://www.hansun.org)



## I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최고 국경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는 해마다 나라의 최고 기념일인 광복절을 맞이하여 기념식과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하면서 ‘광복’의 의미도 잘 모르고, 광복절의 회수도 정확히 셈하지 못한 채 기념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광복의 의미를 해방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광복의 의미와 해방의 의미는 분명히 다르다. 우선 국어사전에 기술된 단어의 뜻만 보더라도 두 단어의 의미는 분명히 다르다. 국어사전은 광복의 뜻을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으로, 해방의 뜻을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각각 풀이하고 있다. 또 한영사전은 광복과 해방의 영어 번역어를 다르게 소개하고 있다. 광복은 independence로, 해방은 libera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는 것’(광복=독립)과 ‘구속이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해방) 간에는 더욱 현격한 차이가 있다.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는 것’은 어떤 민족이 외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로 독립하는 것을 뜻한다. ‘구속이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어떤 민족이 외국의 지배로부터 단지 벗어나는 구속의 제거만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해방은 민족이 외세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것만을 뜻하고, 주권국가를 형성한 것까지를 뜻하지는 않는데 반해, 광복 및 독립은 민족이 해방된데 더하여 주권국가를 형성한 것까지를 의미한다.

외세의 지배에서 해방되고도 주권국가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우리 민족만 하더라도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으나, 1948년 8월 15일까지는 독립하지 못한 채 미군의 점령통치를 받았다.

우리 민족의 국가인 대한제국은 1910년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됨으로써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나라를 상실한 우리 민족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왔으나 힘이 너무 모자라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다행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소련 등 연합국이 일본을 패망시키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주었다. 그 때 우리 민족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만 되었지 주권을 가진 국가로 독립하지는 못했다.

해방정국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들은 해방을 독립(즉 광복)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한 점은 1945년 10월 이승만 박사가 미국으로부터 귀국한 직후 좌·우·중의 모든 정치세력이 참여하여 결성한 단체의 명칭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였다는 사실이나, 해방 후 해외에서 귀국한 독립운동가들이 귀국소감을 밝히면서 ‘조국광복에 기여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는 사실에서 명확하게 확인된다. 우리 민족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3년 동안 주권국가를 만들지 못한 채 미국과 소련의 점령통치를 받았다. 우리 민족은 1948년 8월 15일에 이르러서야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독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광복절은 1949년 9월 21일 국회가 제정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경일이 되었다. 당초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초안은 3·1운동을 기념하는 3·1절, 대한민국 최초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는 헌법공포기념일, 대한민국의 독립(건국)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일, 단군왕검이 우리 민족의 최초 국가를 만든 것을 기념하는 개천절 등 4개의 국경일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 정부는 1945년 8월에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은 국경일로까지 기념할 가치가 없으며, 같은 8월 15일에 독립을 기념하면서 부수적으로 기념할 사항으로 간주했다. 자기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해 이 민족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날을 국경일로 기념하는 외국의 사례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정부의 그러한 입장은 타당한 것이었다. 다른 국가들이 자기 힘이 아닌 외세의 힘으로 해방된 것을 국경일로 기념하지 않는 것은 외세에 의한 해방이란 다행스런 일이지는 하지만 국경일로 기념할 자랑스러운 일은 못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때, 국회의원들은 초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초안에 기술된 국경일의 명칭 가운데 ‘헌법공포기념일’을 ‘제헌절’로,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바꾸었다. 국회 본회의는 법사위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들이 ‘독립기념일’의 명칭을 ‘광복절’로 바꾼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껏 알려진 것이 없다. 필자가 유추컨대, 3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 같다.

첫째 요인은 일제하나 해방공간에서 민족주의세력이 ‘독립’에 해당하는 말로 ‘광복’이란 말을 많이 사용했던 관행이다. 일제시대나 해방공간에서 공산주의세력은 ‘해방’이란 용어를 많이 썼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족해방’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 비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족해방이란 피압박민족이 정치적인 독립을 거쳐서 사회주의 국가로 되는 것까지를 말한다. 정치적 독립만으로는 민족해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견해이다. 민족주의세력은 우리 민족의 국가가 사회주의국가로 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애용하는 ‘해방’이라는 용어 대신에 ‘광복’이란 용어를 애용했던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광복’이란 상실한 주권국가의 회복, 즉 정치적 독립이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던 시기의 대한민국 국회는 민족주의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일제하 독립운동시절부터 ‘광복’을 애용하던 관행을 따라서 독립기념일 대신에 광복절을 채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인은 1948년의 독립은 우리 민족이 역사상 최초로 쟁취한 독립이 아니라, 역사상 오랜 세월을 걸쳐 독립국가를 유지해온 우리 민족이 잠시 상실했던 독립을 되찾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국회의원들의 욕구이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독립’이라는 용어는 ‘신생(新生)’의 의미를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과거 독립국가로서의 긴 역사를 가져 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잃었던 주권(빛)’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진 ‘광복’이라는 용어를 ‘독립’보다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국가의 명절을 뜻하는 국경일 명칭의 끝

글자를 ‘-절’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회의원들의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이 ‘독립기념일’의 ‘기념일’을 ‘절’로 바꾸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 II

이상에서 살펴 본, ‘광복’이라는 용어의 뜻으로 보나, ‘광복절’이라는 국경일을 제정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취지로 보나,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주권국가를 건립하여 ‘독립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제정된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널리 오해되고 있는 바와 같이 광복절이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외세의 힘에 의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제정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정부도 잘 알고, 국회도 잘 알고 있었다.

이처럼 ‘광복’과 ‘해방’의 의미가 분명히 다르고,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주권을 가진 나라로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제정된 것이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로 제정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은 광복절을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

광복절을 1948년의 독립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기념하지 않고 1945년의 해방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잘못 기념하고 있는 사실은 우선 광복절의 회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起算) 연도를 1945년으로 삼고 있는 점에 의해 확인된다. 다음으로 광복절을 맞이하는 대통령의 기념사를 비롯하여 주요 인사들의 기념사나 언론매체들의 기념기사가 1948년의 독립국가 건국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1945년의 해방을 중심 사항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의해 확인된다.

왜 이런 부끄러운 잘못이 범해지고 있는가?

그 첫째 원인은 이 나라 신문기자들의 무지와 고집에 있다. 광복절 기념식이 최초로 거행되던 기기에 신문은 전란으로 정부가 와해되다시피 한 상황이라서 정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들 주관대로 광복절 기사를 보도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개최한 최초의 광복절 기념식은 6·25전란 중인 1950년 8월 15일 당시의 임시수도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에서 극히 초라하게 거행되었다. 이날의 광복절 기념식은 제2회 광복절 기념식이었다. 제1회 광복절 기념식은 1949년 8월 15일에 거행되었어야 하는데,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1949년 9월에야 제정되었기 때문에 제1회 광복절 기념식으로 거행되지 않고 제1회 독립기념일 기념식으로 거행되었다. 1950년 8월 15일 대구에서 거행된 광복절 기념식이 제2회 광복절이었다는 사실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광복절 기념사에 명기되어 있다. 이 대통령의 기념사 제목은 ‘기념사(제2회 광복절을 맞이하여)’로 되어 있고, 기념사의 첫머리는 “금년 8·15 경축일은 민국독립 제2회 기념일로서”라고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광복절 회수를 제2회로 올바르게 계산했는데 신문들은 제5회 광복절로 잘못 보도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개최한 두 번째 광복절 기념식은 1951년 8월 15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거행되었다. 정부는 제3회 광복절이라고 발표하고, 대통령 기념사의 제목도 ‘제3회 광복절을 맞이하여’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문들은 이날의 광복절 기념식을 보도하면서 제6회 광복절로 보도했다.

당시 신문기자들은 ‘광복’과 ‘해방’의 의미차이를 잘 몰랐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도 알지 못했다. 더구나 전란 중에 정부가 이리저리 피난 다니고 있는데다가 부산정치파동과 같은 어이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어서 신문기자들은 정부의 도덕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 역시 북한 공산군과 싸우고 국내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일에 바빠서 광복절 회수 계산 같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신문들을 교도할 여유와 권위를 가지지 못했다.

국회 또한 전쟁과 정쟁에 휘말려 지내느라 광복절 그 자체에도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처지였으니 그 회수가 올바르게 계산되고 있는지 여부 같은 것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광복절의 회수에 관해 정부는 1948년에서 기산하고, 신문들은 1945년에서 기산하던 엇갈림은 이승만 정부의 초기 구성원들이 대부분 교체되면서 48년 기산을 유지하려는 인사가 사라지자(정

부에 남아 있는 이승만 대통령은 고령에다 건강이 좋지 않아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처지가 못 되었다) 우물쭈물 해소되었고, 언제부터인가는 명확치 않으나 정부도 광복절 회수를 45년부터 기산했다.

광복절 기념식이 해방 기념식으로 거행되는 부끄러운 일이 자행되게 된 두 번째 원인은 4·19 이후 보편화 된 이승만 독재에 대한 비판이 이승만 주도의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평가절하적 인식으로까지 확대된 점이다. 5·16주체세력도 그러한 인식을 수용했다. 그 결과 1961년 이후 대통령들의 광복절 기념사에서는 해방의 의의만 언급되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독립의 의의에 대한 언급은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980년대 이후 더욱 확산되었다. 남한에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세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하면서, 대한민국을 와해시키기 위한 혁명투쟁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였다’라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널리 확산시켰다. 그들 좌익혁명세력의 반대한민국적 역사해설이 확산되자 그에 편승하여 상해 임시정부와 김구를 중시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건국의 의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면서, 광복절에서는 건국-독립을 기념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해방만을 기념해야 된다고 역지를 부렸다. 심지어 그들은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친일파들의 논리라고까지 말하면서 광복절 기념식에서는 ‘건국’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4·19, 5·16이후의 정부의 관행으로 인해 1980년대 말 이후에는 정부의 광복절 기념식에서는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과 독립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금기처럼 되었다. 당초 대한민국의 건국=독립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로 제정되었던 광복절의 기념식이 이렇게 변태적으로 뒤집어진 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수

치스러운 일이다.

올해 광복절부터서는 그 기념식 회수는 수정되지 않더라도, 기념식의 내용이나마 광복절 제정의 본래 취지대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독립에 초점을 맞추어 거행되면 좋겠다. 적어도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만이라도 대한민국의 건국과 독립이 해방보다 더 비중 있게 언급되었으면 좋겠다.  
<끝>